민원현장

안양새물공원 파크골프장

안양시 박달동 새물공원 이용객들이 공원 내 파크골프장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산책을 하던 공원 이용객이 파크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치료를 받는 등 안전시설이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새물공원 이용객들이 공원 내 파크골프장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새물공원 내 파크골프장 모습. 박용규기자

'골프공 공습' 부상 날벼락

박달동에 18홀 규모 4월 문열어
산책 시민 날아오는 공에 맞아
안양도시公, 안전시설 뒷북 강화

30일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9월 박달동 새물공원 내 유휴부지 9천300여㎡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 뒤 시민여가활동을 돕겠다며 8천여만원을 들여 18홀(A·B코스 각 9홀), Par 66타, 총연장 915m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이후 지난 4월 정식으로 개장했고, 현재 관리·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공원 이용객들이 파크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 때문에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파크골프장 구조상 50~100m 거리를 보내기 위해 강하게 공을 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런 구간은 언덕 등의 영향으로 옆 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공원 이용객들은 경기 중 날아오는 공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부상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파크골프장은 대부분 공원 주변에 띄엄띄엄 형성돼 있어 주로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와 맞닿아 안전시설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말의 경우 파크골프장 주변으로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아이들이나 반려견 등도 많아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난 26일 새물공원을 산책하던 A씨(28·여)는 주변 파크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쓰러졌다. 공에 맞은 A씨는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그는 "파크골프장에 그물망이 설치됐지만 골프공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그물망이 아닌 펜스 등을 설치,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우선 부상을 입은 이용객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파크골프장 안전망을 더욱 높이는 등 안전 시설을 빠르게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민선 8기 수원특례시 '시민협력국' 신설

갈등 해결 '컨트롤 타워' 역할
시장직 인수위 활동 종료 해단

민선 8기 수원특례시에 신설될 실·국은 여론 수렴 기능을 담당할 '시민협력국(가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수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해단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 4월12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원특례시와 같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한시적인 기구인 실·국 한개가 추가(본보 5월10일자 10면)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은 시민 의견에 따라 갈등 사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는 해당 실·국을 만들 예정이다. 더욱이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KBS수원방송센터의 용도 변경 등 지역 내 크고 작은 불협화음과 관련, 이 당선인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강조하는 등 시민 참여형 행정을 약속한 만큼 시민협력국이 이와 관련한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분석된다.

뿐만 아니라 이 당선인은 지난 2011~2015년 제2부시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설계한 바 있어 여론을 기반으로 한 정책방향 결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는 행정구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 당선인의 최우선 공약인 30대 대기업 유치가 성공할 경우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기대되기에 이를 염두에 둔 채 행정구를 나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정 구호를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로 정한 인수위는 ▲탄탄한 경제 ▲깨끗한 환경 ▲따뜻한 돌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세부 사업은 ▲기업유치 ▲사회적경제 ▲민생경제 ▲첨단교통 ▲주거환경 특례 등 10개 사업이다. 이정민기자

3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회 및 해단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당선인과 인수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준 당선인 캠프 제공

화성 동물원 운영 농업법인 '버티기'… 해산 위기

법인설립요건 확인요청에 불응

화성 농지를 임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수년째 동물원 등을 운영해온 A농업법인이 법인 설립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강제 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농업법인은 지난 2016년부터 화성 송산면 지화리 일대 농지 10여필지를 임대, 무허가로 수십여채 건축물을 지어 동물원 등을 갖춘 체험시설을 운영(본보 20일자 9면)해 오다 시에 적발됐다.

3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지난 2015년 7월27일 설립, 같은해 8월12일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냈지만, 현재까지 설립신고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A농업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A농업법인은 시의 법인설립요건 성립여부 확인요청을 2차례나 불응, 강제해산 위기에 놓였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총출자액의 10%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농업법인은 이 같은 규정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하지 않아 시로부터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결국 시는 지난 6일 A농업법인에 3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1월5일까지 A농업법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강제 해산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농업법인이 현재까지도 법인설립요건 성립여부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계속 불응하면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농업법인 관계자는 "현재 법인 이사들이 모두 손을 놓은 상태"라며 "어쩔 수 없이 해산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성남시, 공공시설·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시행

성남시가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 시각매체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색채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지역을 대표하는 18개의 '성남색'을 지정했다.

성남색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연회색과 파란색 계열, 차분한 느낌의 옅은 주황색 계열, 중후한 느낌의 짙은 갈색 계열 등이다.

성남색은 남한산성, 모란시장, 탄천, 성남아트센터, 율동공원, 판교테크노밸리의 공공 공간, 공공시설물, 건물 외벽 등에 경관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활용된다.

시는 이와 함께 기존에 수정·중원, 분당, 판교 등 3개 권역 216개 색채 팔레트를 재구성해 265개 색의 통합색채 팔레트로 재정비했다.

통합색채 팔레트는 지역 곳곳에서 성남시 로고 등의 공공시각 매체에 사용하거나 민간 건축물을 지을 때 활용된다. 색채 가이드라인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안치호기자

광주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광주시는 올해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깎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으로 지난 2020년부터 3년째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2천362건에 대해 25% 감액된 29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38억8천400만원)의 25%인 9억6천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0(2018.7.2)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시행함을 안내드리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2. 7. 4 (월) ~ 8. 12 (금)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보상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1(갈현동 산31-1)]

□ 신청 구비서류 : 개별 송부되는「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 안내문」참고

2.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내용 및 선정 기준일자

□ 시행내용

구 분	공급유형
이주대책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
주택특별공급	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생활대책	근린생활시설용지
협의양도자	협의양도인 택지, 협의양도인 주택

□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 선정기준일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7. 10.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6. 10. 12(공람공고 1년 이전)
◎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7. 10.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
* 기존가옥철거자, 협의양도인 주택 : 2017. 10. 12(공람공고일)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소유자 및 세입자) 선정기준일 : 2017. 7. 12(공람공고 3개월 이전)
◎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6. 10.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이전)
◎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17. 10. 12(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 신청관련 유의사항

①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 안내문〉은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통보받았다고 하여 이주·생활대책 대상자 등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 적격여부는 접수된 서류 등을 기초로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②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신청서류의 허위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주 및 생활대책 등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하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시행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및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공사 내부지침 등 포함)의 기준에 따릅니다.

2022. 7.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장